

일본의 헌법 개정 논의와 아베 총리의 개헌 구상*

한익석 ■ 성신여자대학교

〈국문요약〉

패전 후 점령 하에서 현재의 헌법이 제정된 이래, 일본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자민당은 1955년 설립 당시 개헌을 창당의 주요 목표로 내세웠으며, 최근 아베 총리의 재집권 이후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구조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정체성이나 지향점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일본이 어떤 국가,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개헌에 대한 자민당과 아베 총리의 구상을 분석하여, 최근 일본의 개헌 논의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주제어: 개헌, 아베, 자민당

I. 서론

아베(安倍晋三) 총리의 재집권 이후 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해석 개헌을 통한 집단적자위권의 용인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의 보수화 또는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헌법 시행 70주년(2017년 5월 3일)을 앞두고 실시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을 실현하여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読売新聞 2017/05/03)¹⁾, 특히 2017년 10월 중의원 선거 승리 이후에는 개헌에 관해 적극적인 의사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어서 올해 1월 4일의 연두기자회견과²⁾, 1월 22일의 자민당 양원(兩院) 의원총회에서 개헌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였다.³⁾

* 본 연구는 2017년 현대일본학회에서 아시아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공동연구 "아베 시대 일본의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1) <http://www.yomiuri.co.jp/editorial/20170502-OYT1T50231.html> (2017/08/01 검색).

2) http://www.kantei.go.jp/jp/98_abe/statement/2018/0104kaiken.html (2018/02/22 검색).

하지만 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아베정권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1955년 자민당이 설립될 때 자민당은 헌법 개정을 당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개헌론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호헌세력과 여론의 반대로 1960년대부터 개헌론은 크게 쟁점화하지 못하였다. 다만 자위대의 위헌성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었고 자민당 정부는 해석개헌을 통해 이에 대응하였다. 개헌론이 다시 불거지게 된 것은 탈냉전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초반 오자와(小沢一郎)가 보통국가론을 제시하면서 활성화 되었다. 한편 1990년대의 개헌론은 단지 헌법 9조의 개정뿐 아니라 환경권, 프라이버시권, 총리의 권한 및 인권 강화 등 다양한 쟁점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000년 중·참의원에 헌법조사회가 설치되고 각 정당들이 이에 대응하면서 개헌논의가 본격화 하였다. 자민당은 2005년 '신헌법초안'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에는 '일본국헌법개정 초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개헌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개헌 논의에 관한 대부분의 관심은 주로 자위대 문제에 집중되면서 일본의 보통국가화 및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예를 들어, 김석근 2016; 김태홍 2015; 오미영 2014; 이명찬 2014 등).

헌법은 국가의 통치구조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정체성 및 지향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본의 헌법 개정 논의는 자위대 문제만이 아니라 천황제, 교육, 긴급사태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자민당과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헌안은 일본이 미래에 어떠한 국가가 되고자 하는지, 어떠한 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텍스트로서 중요한 분석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6년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戦後レジームからの脱却)'과 이를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던 아베가 재집권한 이후, 최근의 중·참의원 선거를 통해 개헌에 필요한 2/3의석을 확보하였고 본인의 개헌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개헌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개헌 논의의 내용과 아베 총리의 개헌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헌법9조 이외의 개헌 쟁점들을 다루거나, 아베 총리가 구상하고 있는 개헌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민당과 아베가 추구하는 새로운 일본은 어떤 모습이고, 개헌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 개헌론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아베의 정치적 성향과 이념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베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 논의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자민당의 최근

3) <http://www.sankei.com/politics/news/180122/plt1801220026-n1.html> (2018/02/22 검색).

개헌안과 헌법 관련 선거공약, 아베 총리의 저서와 연설, 공표된 의견 등을 통해 아베가 구상하는 개헌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II. 헌법 개정 논의의 전개 과정

1. 전후 일본헌법의 제정과 개헌 논의

패전 후 점령당국(GHQ)은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기 위해 신헌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일본 정부에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1945년 10월 일본 정부는 헌법문제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946년 2월 헌법 초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천황제의 유지 등 메이지헌법(明治憲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거부되었고, 맥아더가 제시한 이른바 ‘맥아더 3원칙’을 기초로 1946년 10월 신헌법이 성립되었다(김재호 1999, 6).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헌법문제조사위원회 위원장이던 마쓰모토(松本蒸治)는 GHQ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일본의 헌법이 미국에 의해 강요되었다는 주장이 확대됨에 따라 개헌론자들이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야가사키 2003, 223).⁴⁾ 한편 1950년의 한국전쟁 발발 이후 경찰예비대가 발족하면서 재군비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시작되었고, 자위대가 설립됨에 따라 합헌성 문제가 제기되었다(전황수 2009, 311). 냉전체제의 심화로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1952년 창당된 개진당(改進黨)과 하토야마(鳩山一郎)가 이끄는 민주당은 자주적 헌법의 제정과 군대 창설을 주장하였으며, 1954년에 각각 당내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하였다(전진호 2006, 6). 특히 하토야마는 1955년 ‘개헌추진자주헌법기성의원동맹’을 발족하면서 점령당국에 의해 강요된 헌법이므로 국민에 의해 개정되어야 하며, 주권국가로서 자위력 보유를 위해 헌법 9조를 개정하는 한편, 국가원수로서의 천황의 지위를 명확하게 할 것을 주장했다(전황수 2000, 312). 반면 사회당은 1955년 ‘헌법옹호국민회의’를 설립하는 등 호헌세력을 결집하였으며, 도쿄대학 헌법연구회 등 학자들을 중심으로 천황의 권한 축소, 완전 비무장화 및 인권 제한조항 폐지와 같이 다른 관점에서의 개헌 논의를 제기하기도 했다(전진호 2007, 6).

4) 야가사키는 당시 총리이던 시테하라(幣原喜重郎)의 주장과 라우엘(Rowell) 문서를 분석한 신도 에이치(進藤榮一)의 연구 등을 근거로 일본헌법 ‘강요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야가사키 2003).

1954년 12월 하토야마 내각이 성립되면서 개헌 문제가 크게 쟁점화 되었지만, 1955년 2월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의석 확보에 실패하였다(김재호 1999, 8). 1955년 11월 결성된 자유민주당은 당의 사명(使命)과 정강(政綱)에 헌법을 자주적으로 개정하고, 점령체제를 재검토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기하였다.⁵⁾ 1956년 6월에 헌법조사회법이 공포되어 1957년 8월에는 내각 헌법조사회가 발족되었다. 하지만 1960년 기사 내각에서 추진한 미일안보조약 개정이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개헌에 대한 사회당과 공산당 및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지면서 개헌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다만 1950년대 중반에는 개헌론과는 별도로 자위대 합헌화를 위한 헌법 9조의 ‘해석개헌’이 시도되었다(전진호 2007, 7).

강력한 개헌론자인 나카소네(中曾根康弘)가 1961년 월간지 정론(正論)에 ‘고도민주주의 민정헌법초안’을 발표하고, 퇴진한 기사(岸信介) 총리가 ‘자주헌법제정국민회의’ 의장을 맡는 등 개헌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박철희 2008, 73). 하지만 극심한 안보투쟁 이후 성립된 이케다(池田勇人) 내각은 개헌 문제로 인한 정쟁을 피하고자 경제성장에 더욱 집중하였다(김재호 1999, 8; 전진호 2007, 7). 1957년 내각에 설립되었던 헌법조사회는 1964년 7월 3일 보고서를 제출하고 해산하였다. 1969년 5월에는 자주헌법제정국민회의가 결성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경제단체인 닛케이렌(日経連)이 개헌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나,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전황수 2000, 313). 자민당은 1971년 당내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하여 천황 지위의 명확화, 자위력의 인정, 참의원 개혁 등을 담은 ‘자민당 헌법개정대강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발표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전진호 2007, 9). 1980년 중·참의원 동시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어 개헌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지만, 스즈키(鈴木善幸) 총리는 국회답변에서 자민당이 2/3의석을 확보해도 개헌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였다. 한편 우파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및 작가, 문화인들이 1981년 결성한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는 헌법 개정을 통한 천황의 국가원수화 등을 제시하였다(전황수 2000, 313). 한편 자민당은 창당 30주년이던 1985년 발표한 신강령(新綱領)에서 기존 헌법의 원칙과 정신을 존중하지만 시대에 맞게 헌법을 수정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전황수 2000, 314). 그럼에도 개헌론자로서 당시 총리였던 나카소네는 자신의 내각에서는 개헌을 정치 과제로 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박철희 2008, 73).⁶⁾ 하지만 자민당의 개헌을

5) 자민당 홈페이지. <https://www.jimin.jp/aboutus/declaration/#sec03>(검색일: 2017년 8월 5일)

6) 나카소네 총리는 “나는 의원 개인으로서는 개헌론자이지만, 내각으로서는 개헌을 정치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는데, 1988년에는 천황의 국가원수화, 헌법 제9조의 수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자적인 헌법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전진호 2007, 9). 이처럼 냉전기에는 자위대 문제 및 몇몇 사안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혁신 세력 및 여론의 강한 반대로 개헌 논의가 정치적 부담이 되면서 본격적인 개헌 움직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자민당 정부는 내각법제국(内閣法制局)을 통한 해석개헌 등을 통해 상황에 대처했지만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2. 탈냉전과 개헌 논의의 확대

탈냉전과 국제정세의 변화는 개헌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90년 걸프전의 발발과 UN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공헌이 쟁점이 되었는데, 1992년 1월 요미우리신문은 일국평화주의와 일국번영주의가 더 이상 ‘국제국가’ 일본으로 통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신문사 내에 ‘헌법문제조사회’를 설치하기도 했다(박철희 2008, 68). 걸프전 이후 1992년 6월 15일 PKO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위대의 해외파견 등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었고, 1993년의 북핵 위기는 일본이 미일동맹 하에서 유사시 어떻게 미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박철희 2008, 68-70). 특히 일본의 국제적 공헌을 강조하며 오자와가 제기한 ‘보통국가론’은 개헌론이 재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오자와는 헌법 전문이나 헌법의 기본원칙 등은 유지해야하지만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가능하도록 하여 UN을 통해 일본이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진호 2007, 10).

1990년대의 가장 큰 특징은 야당들이 개헌론에 가세했다는 점이다. 1992년 창당한 일본신당(日本新党)은 강령을 통해 헌법 개정을 주장하였으며, 민사당(民社党)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민사당과 대화하는 모임’은 1992년 12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헌법 해석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가능하고, 국제공헌을 위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헌법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전황수 2000, 315). 한편 1994년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된 사회당은 미일동맹을 긍정하고 자위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 노선을 전환하였다. 이처럼 야당에서도 개헌론이 제기된 배경에는 해석개헌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일본이 탈냉전 이후의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전진호 2007, 10).

일정으로 올리지는 않겠다”라고 했다고 한다(전진호 2007, 9).

또한 사회당과 같은 호헌세력이 약화되고 새로운 보수정당들이 지지를 확대하게 되었다는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개헌 논의는 1994년 11월 요미우리신문이 ‘헌법 개정시안’을 발표하면서 더욱 본격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현행 헌법의 원리를 존중하되 국제적 책무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인권 강화와 가치관의 다양화에 대응하자는 것이었다(전황수 2003, 316).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개헌에 대한 지지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993년 4월에는 개헌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50.4%, 반대하는 응답자는 33%였으며 1999년 3월 조사에서는 찬성 53%, 반대 31%로 나타났다(読売新聞 1999/04/09).⁷⁾

1997년 2월에는 자민당의 헌법조사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으며, 당시 제 1야당이던 신진당(新進党)도 당 대회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초당파적인 ‘헌법조사위원회 설치 추진에 관한 의원동맹’이 결성되었다(전황수 2000, 316; 전진호 2007, 11). 1999년 오자와(小沢一郎) 자유당(自由党) 대표는 UN 상비군 신설과 헌법재판소 설치, 자위권의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국 헌법개정시안’을 제시했다(전진호 2007, 13). 같은 해 공명당에서도 개헌 대신 가헌(加憲)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개헌론에 참여했으며, 민주당도 개헌을 지지하는 여론을 배경으로 논헌(論憲)·창헌(創憲)이라는 명분으로 개헌 논의에 합류하였다(전진호 2007, 21). 예를 들어, 민주당의 하토야마는 일본의 평화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헌법의 문안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필요에 따라 헌법 개정을 논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의 길이다”라고 주장하였다(이경주 2000, 169). 사회당과 공산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1999년 7월에는 중·참의원에 헌법조사회(憲法調査会)를 설치하는 국회법이 통과하였고, 2000년 1월에 양원에 설립된 헌법조사회는 2005년 4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⁸⁾ 특히 자민당은 양원의 헌법조사회에 대응하여 모리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헌법기초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05년 10월 ‘신헌법초안’을 발표하였다(박철희 2008, 74).

탈냉전 이후 일본의 개헌 논의는 현행 헌법 정신의 존중을 바탕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천황의 국가원수화와 자위대 해외파병,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전진호 2007, 12). 또한 알권리·환경권 등 새로운 조항의 추가와 참의원 문제, 수상공선제 도입과 총리권한 강화, 사학조성과 헌법개정발의 여건 등이 개헌 논의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전황

7) 전황수(2009, 325)에서 재인용.

8) 헌법조사회가 국회에 설치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97년 310인의 초당파적 의원모임으로 결성된 ‘헌법조사위원회설치추진의원연맹’이 있는데, 이후 ‘헌법조사추진의원연맹’으로 개칭하고 헌법 96조의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高見勝利 2017, 107).

수 2000, 304-310). 하지만 사회당·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호헌 세력은 국민의 알권리, 환경권, 인권조항, 사생활 보호 등의 쟁점화는 이를 구실로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朝日新聞 2000/05/03).⁹⁾

3. 2000년 헌법조사회의 설치와 각 정당의 개헌논의

2000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헌법조사회는 2005년 4월 국회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헌법조사회 설치 이후 각 정당도 이에 대응하여 개헌 논의를 위한 기구를 당내에 설치하였다. 자민당과의 연립정부에 참여한 공명당은 국민주권, 항구평화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라는 3원칙과 헌법 9조의 유지를 기초로 환경권이나 프라이버시권과 같은 내용을 더할 수 있다는 가헌론을 제시하였다(전황수 2000, 322; 박철희 2008, 81-82). 민주당은 2004년 6월 ‘헌법제언 중간보고’ 그리고 2005년 10월 31일 ‘헌법제언(憲法提言)’을 발표하였다. 민주당은 현행 헌법의 긍정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지만, 헌법 해석의 문제가 있고 국제사회의 요청이나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총리주도, 분권화, 인권과 국제협조주의 등을 반영하는 창헌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박철희 2008, 78-79). 한편 자민당은 2005년 11월 ‘신헌법초안’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헌법 9조의 2항을 전면 개정하여 총리가 최고지휘자가 되는 ‘자위군’의 보유를 명기하는 것이었다. 자민당은 헌법 개정 논의를 통해 일본의 전통과 가치, 국민들의 의무와 책임, 국제평화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등을 강조하였다(전황수 2000, 320; 박철희 2008, 85). 2007년 8월, 헌법심사회(憲法審査會)가 헌법조사회를 계승하여 설치되었다.

개헌 논의의 진행과 함께, 2006년 총리에 취임한 아베는 9월의 취임 연설(전후 체제로부터의 새로운 출발)에서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헌법 제정을 위해 몰두하고, 자신의 정권과제로서 헌법 개정을 국민에게 호소”한다고 표명하였다(김태홍 2015, 219). 이는 자민당의 28명 총리 중 국회소신표명연설에서 헌법 개정을 내세운 두 번째 사례로, 초대 하토야마 총리 이후 처음이다(塩田潮 2016, 103). 아베는 특히 헌법 개정을 위한 첫 단계로서 헌법 96조의 개정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2007년 5월 통과시킨 국민투표법(日本国憲法の改正手続に関する法律)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 5월 이에 부정적이던 내각법제국 장관을 퇴임시

9) 전황수(2009, 324)에서 재인용.

켰다(김태홍 2015, 220). 또한 사적 자문기관인 ‘일본의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를 구성하였는데, 2008년 간담회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헌법 ‘9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가 상당했지만, 개헌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니혼케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이 2000년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1%였으며, 헌법기념일을 앞둔 2007년 5월 조사에서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51%, 반대자가 35%였으며,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에서는 찬성이 51%, 반대가 19%로 나타났다.¹⁰⁾

III. 아베 총리의 정치적 신념과 개헌문제

1. 아베 총리의 정치적 배경

아베는 자민당 정치의 목표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하나는 경제성장에 의한 풍요로움의 실현이고, 또 하나는 ‘점령체제로부터의 탈각’인데, 아베는 자민당이 제1의 목표는 달성했으나 제 2의 목표를 뒤로 미루었으며, 자신의 사명이 바로 제2의 목표를 완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와타나베 오사무 2007, 89). 즉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이 아베의 정치적 지향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아베는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의 정치적 성향을 이어받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베 신조의 어머니 아베 요코(安部洋子)는 2003년 기고문에서 ‘정책은 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와, 성격은 아버지 아베 신타로와 유사하다고 기술하였는데, 이는 국가관이나 사상, 정치노선에서는 기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정치가로서의 자질이나 생활, 정치수법의 측면에서는 아버지와 비슷하다는 의미이다(塩田潮 2016, 20). 기시 연구의 대가인 하라(原彬久) 교수 또한 ‘아베 안에 기시가 있다고 표현할 만큼(朝日新聞取材班 2016, 12), 아베의 정치적 이념은 기시 전 총리와 닮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 개정을 염원하던 기시는 전후의 일

10) <http://www.nikkeibp.co.jp/sj/2/column/y/58/> 정리본 p. 40 (2017/08/06 검색).

11) 강력한 개헌론자이던 나카소네는 총리 취임 후, ‘전후정치의 총결산(戰後政治の總決算)’을 강조하였다.

본국헌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는데, 자신의 회고록에서 점령 초기의 기본방침이 일본의 군사력과 공업력을 말살하는 것은 물론 일본인의 정신구조를 변혁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후 정책이 일본국민의 얼을 빼앗고 도덕을 파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일본 국민생활의 전 분야에 강제, 간섭, 감시가 가차 없이 실시되었다고 주장하였다(塩田潮 2016, 24-25). 아베도 기시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저서에서 아베는 “전후 일본의 틀은 헌법은 물론, 교육정책의 근간인 교육기본법까지 점령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연합군의 최초의 의도는 일본이 다시는 열강으로 대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국가의 골격은 일본인 자신의 손으로, 백지상태부터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독립을 회복할 수 있다. 헌법 개정 이야말로 독립의 회복의 상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安倍晋三 2006, 28-29).

아베는 1997년 8월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와 ‘일본의 미래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들의 모임’을 결성하여 사무국장을 맡았다. 한편 우파 성향 정치단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회의(日本会議)’가 1997년 5월 30일에 결성되었다. 아베 2차 내각의 경우 아베를 포함한 19명의 각료 중 13명이 일본회의 소속이었다는 점은(이지원 2014, 77), 아베 정권에 있어서 일본회의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일본회의의 주장은 아베의 정치적 지향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회의(日本会議)는 강령을 통해 “유구한 역사로 길러진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건전한 국민정신의 부흥을 꾀한다”, “나라의 영광과 자주독립을 유지한다”는 등의 설립 목적을 공표하고 있으며, 설립취지문(設立趣意書)에는 “도쿄재판사관의 만연은 외국에 대한 비굴한 사죄외교를 초래하고 다음 세대를 짊어질 청소년의 나라에 대한 긍지와 자신감을 상실하게 했다”, “숭고한 윤리감이 붕괴되고 가족이나 교육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했다”는 등의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¹²⁾ 일본회의는 또한 제1차 아베정권이 추진했던 교육기본법 개혁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전전(戰前)의 도덕으로 회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樋口陽一·小林節 2016, 147). 2006년 12월 아베는 1947년 만들어진 교육기본법을 처음으로 개정했는데, 이는 천황 중심의 사상과 군사대국화 필요성 등을 젊은 세대에게 각인시키려는 시도였다(이기완 2013, 135). 즉 아베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일본 헌법은 ‘강한 일본’이 아닌 ‘약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독립의 회복을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의 개정과 함께 일본인들 스스로 만든 헌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

12) <http://www.nipponkaigi.org/about> (2017/08/11 검색).

고 있다.

2. 수정주의적 역사 인식과 국가주의

아베 총리의 정치적 이념과 지향점은 그의 저서인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国へ)’에 잘 나타나 있다. 아베는 보수라는 것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 생각하는 자세라고 규정하면서, 일본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진 전통이 왜 지켜져 왔는지에 대해 사려 깊은 인식을 가지는 것이 보수의 정신이라고 주장한다(安倍晋三 2006, 27). 아베는 또한 군국주의 시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1932년, 33년의 신문에 ‘단호히 싸우라’는 글귀가 두드러진다. 열강이 아프리카, 아시아의 식민지를 기득권화 하는 중에 언론을 포함한 민의의 다수가 군부를 지지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역사라는 것이 선악으로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安倍晋三 2006, 25-26). 또한 아베는 소학교 4학년이던 1964년의 도쿄올림픽 당시 자신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이때까지 우리들은 세계에서 일본이 아직 작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이 세계를 향해 그 존재를 이렇게 과시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선하게 생각했고 놀라워했다. 어린 마음에도 자랑스러운 기분을 가진, 최초의 체험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安倍晋三 2006, 77-78).¹³⁾

아베는 일본의 경제발전에 대한 아버지와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일본인의 근면성이라고 생각했던 자신과 달리 아베 신타로가 천황이라고 대답한 일화를 통해 일본의 국가성을 나타내는 근간이 천황제라고 주장하였다(安倍晋三 2006, 101). 또한 2차 대전 중 전사한 와시오 카즈미(鷲尾克己)¹⁴⁾ 소위의 일기를 소개하며,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도 일본의 유구한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했다고 하면서, 현재의 풍요로운 일본은 그들이 바친 고귀한 생명 위에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安倍晋三 2006, 107). 아베는 이러한 희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현재의 관점에 대해 자학적(自虐的) 역사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아베는 전후 일본에서 전쟁의 원인과 패배의 이유를 오로지 국가주의로 규정한 결과, 국가를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발상이 거의 없다고 비판한다(安倍晋三 2006, 202). 반면 영국의 경우 수탈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자학적 역사관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安倍

13) 남상욱(2014, 170)에서 재인용.

14) 가미가제 특공대로 오키나와 전투에서 전사함.

晋三 2006, 203). 계속해서 아베는 대치 총리가 교육개혁을 통해 역사에 대해 균형적으로 서술했으며, 식민지 노예 노동의 부정적 측면도 서술했지만 선구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한 것을 서술했음을 지적하였다(安倍晋三 2006, 204). 이러한 논의는 결국 교육개혁으로 이어지는데, 교육의 목적은 뜻있는 국민을 기르고 품격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安倍晋三 2006, 207). 특히 가족의 모델을 제시하지 않는 일본의 교육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며(安倍晋三 2006, 215-218), 젊은이들에게 우선적으로 향토애를 양성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한다(安倍晋三 2006, 95). 이처럼 아베는 자신의 저술을 통해 수정주의적 역사관과 국가 중심적인 사고방식, 이를 전파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와타나베는 천황과 일본 고유의 특색에 대한 강조, 가족과 공동체, 국가를 강조하는 아베의 정치사상을 내셔널리즘과 신보수주의로 규정한다(와타나베 2008, 113-119). 다만 아베의 신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변형된 사상이라고 지적했다(와타나베 2008, 120).

대외 관계에 있어서 아베는 미일동맹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아베는 1970년의 미일안보조약의 연장과 관련하여 자신의 고등학교 수업 중 일화를 소개하면서, 비판적인 선생님에게 “새 조약에는 경제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일간의 경제협력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으며, 자신은 안보조약이 일본의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대학에 들어가서는 안보조약이 일본의 장래에 있어서 사활적(死活的な) 조약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한다(安倍晋三 2006, 20-21). 이처럼 미국과의 동맹 강조는 일본의 진정한 자주독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순적일 수 있지만, 아베는 현실주의적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동맹이 일본의 안보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통한 대등한 동맹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후의 반미(反米)주의적 자주론자들과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3. 아베 총리의 집권과 개헌을 위한 노력

2012년 재집권하게 된 아베는 2차 내각 성립 후 집단적자위권을 용인하는 해석개헌과 헌법 개정을 수년 내에 실현한다는 정치일정을 표명하였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도발, 중국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헌법 9조의 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자 하였는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미국을 도울 수 있다면 미일동맹이 보다 견고해진다고 주장하였다(김석근 2016, 152). 2013년

에는 헌법 개정 요건의 완화를 위한 96조의 개정을 주창했으나 ‘선행개헌’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론의 반대에 직면하여 논의가 중단되었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반대하였으며 38%가 찬성을 표명하였다.¹⁵⁾ 한편, 아베 총리는 2013년 8월 고마츠(小松一郎)를 내각법제국장관으로 기용하였고, 국가안전보장 기본법을 통과시켰으며 2014년 7월 1일에는 ‘신3요건’하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석개헌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해석개헌은 이후 내각의 변화나 교체와 함께 변경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문개헌을 하지 않는 한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후 2015년 5월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각의에서 평화안전법제(안보법안)이 결정되었고, 7월 15일에는 중의원에서 그리고 9월 19일에는 참의원을 통해 가결되었다. 이 법안에는 자민당, 공명당, 차세대당, 신당개혁,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등이 찬성하였다(김석근 2016, 153).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중·참 양원에는 개헌세력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5월 아베 총리는 헌법을 개정하여 2020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구체적인 개정 내용으로 헌법 9조에 자위대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는 것과 고등교육의 무상화 등을 제시하였다.¹⁷⁾ 한편 아베는 2012년 제시된 자민당의 개정 초안을 고집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¹⁸⁾ 아베의 발언에 대해 공명당과 일본유신회는 개정 절차 돌입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공산당은 절대 반대의 입장을 밝혔으며, 민진당은 부정적이지만 헌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반응을 나타냈다.¹⁹⁾ 아베 총리가 교육무상화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가헌을 주장하는 공명당이나 개정에 신중한 민진당 등 보다 많은 정당들이 개정에 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는 주장이 있다.²⁰⁾ 실제로 아베는 헌법 9조의 개정에 가장 우선권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오다는 아베 총리가 2006년 10월 외국 미디어 인터뷰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15) <http://jp.wsj.com/articles/SB10001424127887324582304578488313061482222> (2017/05/07 검색).

16) 일본 정부 내에서 헌법해석은 1차적으로 각 법령을 소관하는 각 성청에서 하고 있다. 성청에서 헌법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나 성청간 헌법해석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내각법제국’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17) <http://www3.nhk.or.jp/news/html/20170503/k10010970011000.html>(검색일: 2017년 5월 7일)

18) <http://www.yomiuri.co.jp/politics/20170501-OYT1T50087.html>(검색일: 2017년 5월 7일)

19) <http://www3.nhk.or.jp/news/html/20170503/k10010970011000.html>(검색일: 2017년 5월 7일)

20) <http://www.yomiuri.co.jp/editorial/20170502-OYT1T50231.html>(검색일: 2017년 5월 7일)

조문으로 전형적인 것이 9조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아베가 개헌의 최대의 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9조의 개정임을 강조하고 있다(塩田潮 2016, 266).

먼저 개헌에 대한 아베 총리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국회에서 행한 소신표명연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아베 총리의 소신표명연설

일시	주요 내용
2006.9.29.21) (165회 국회)	<p>향후의 바람직한 일본의 방향을 용기를 가지고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최고 지도자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다.</p> <p>목표로 하는 나라의 모습은 활력과 기회와 부드러움이 넘치고, 자율의 정신을 중시하는 세계에 열린 ‘아름다운 나라 일본’이다.</p> <p>‘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p> <p>첫째, 문화, 전통, 자연, 역사를 소중히 하는 나라</p> <p>둘째, 자유 사회를 기본으로 하고, 규율을 아는 위엄 있는(凜とした) 나라</p> <p>셋째, 미래를 향해 성장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p> <p>넷째, 세계에 신뢰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리더십이 있는 나라</p> <p>활력이 충만한 오픈 경제사회의 구축</p> <p>재정건전과 행정개혁의 단행</p> <p>건전, 안심 사회의 실현</p> <p>교육재생</p> <p>주장하는 외교로의 전환</p> <p>국가의 이상,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헌법이다. 점령시대에 제정된 헌법이 60년 가까이 지났다.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헌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헌법의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조기 성립을 기대한다. 일본은 오랜 역사, 문화, 전통을 가진 나라다. 새로운 국가 창조를 시작할 때다.</p>

21) <http://www.kantei.go.jp/jp/abespeech/2006/09/29syosin.html> (검색일: 2017년 11월 4일)

일시	주요 내용
2007.09.10. ²²⁾ (168회 국회)	퇴진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교육기본법 개정과 공무원제도 개혁법 성립 등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가 골격 만들기를 진행했다. 저출산 고령화와 국제화에 견딜 수 있는 강한 경제를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추진해 왔다. ‘나뉘먹기(ばらまき)’와 ‘호송선단(護送船団)’이라는 과거 정치 수법으로의 회귀는 절대 없다. 신뢰할 수 있는 연금 재구축 개혁의 과실을 지방이 실감할 수 있도록 교육재생을 구체화 안심 생활 사회의 실현 지속적 경제성장의 실현, 간소한 정부 주장하는 외교의 전개 국가의 모습과 형태를 말하는 헌법에 관해, 국민투표법이 성립하여 개정에 관한 논의를 심화하는 환경이 되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2013.01.28. ²³⁾ (183회 국회)	나는 병으로 총리직을 사임하고 큰 정치적 좌절을 경험 한 사람이다. 과거의 반성을 거울삼아 진지하게 국정 운영을 담당해 나갈 것을 맹세한다. 경제재생 진재부흥 외교안전보장 - 미일동맹 강화, 지구의(地球儀)를 바라보듯 전 세계를 부감(俯瞰)하여 자유, 민주주의 등 기본적 가치에 입각한 전략적 외교 전개
2013.10.15. ²⁴⁾ (185회 국회)	부흥의 가속화 성장전략의 실행 강한 경제를 기반으로 사회보장개혁과 재정건전화 현실을 직시하는 외교·안전보장정책의 수립 - 적극적 평화주의, 국가안전보장전략 책정 헌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투표 절차를 갖추고, 국민적인 논의를 더욱 심화해 나가야 한다.

22) <http://www.kantei.go.jp/jp/abespeech/2007/09/10syosin.html> (2017/11/04 검색).

23) https://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20130128syosin.html (2017/11/04 검색).

24) https://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20131015shoshin.html (2017/11/04 검색).

일시	주요 내용
2014.09.29. ²⁵⁾ (187회 국회)	재해에 강한 국가 만들기 부흥의 가속화 지방창생 지구를 바라보는 외교 - 적극적 평화주의 성장전략의 실행
2016.09.26. ²⁶⁾ (192회 국회)	재해복구·부흥 아베노믹스의 가속 일억총활약 지방창생 지구를 바라보는 외교 헌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일본은 어떤 국가를 목표로 하는가? 결정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다. 여야의 입장을 넘어 헌법 심사 회에서의 논의를 심화시켜야만 한다.

*출처: 수상관저 홈페이지

아베 총리는 첫 집권기의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는 전통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가치와 신자유주의적 개혁, 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 견해를 드러냈지만, 2012년 재집권 이후에는 아베노믹스를 앞세운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의 적극적인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의 실패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표와 같이 아베가 소신표명연설을 통해 헌법 개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헌안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헌법 9조의 이외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은 어떠할까? 헌법 시행 70주년을 앞둔 2017년 3~4월에 실시된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의 전국여론조사에 따르면,²⁷⁾ 유권자들이 헌법 중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복수응답), 전쟁포기(戦争放棄)와 자위대 문제가 63%, 천황과 황실

25) https://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20140929shoshin.html (2017/11/04 검색).

26) https://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20160926shoshinhyomei.html (2017/11/04 검색).

27) <http://www.yomiuri.co.jp/feature/opinion/koumoku/20170501-OYT8T50009.html> (2017/05/07 검색).

의 문제가 42%, 환경문제가 3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헌법개정 문제(32%)와 생존권 및 사회복지의 문제(32%)가 꼽혔다. 헌법의 개정에 관해서는 개정을 지지하는 의견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각각 49%로 동률을 이루었다. 한편 헌법 9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응답으로 35%가 지금과 같이 해석과 운용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42%, 해석과 운용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35%를 차지했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NHK의 여론조사에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57%,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25%였으며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는 바꾸지 않는 편이 좋다고 63%, 바꾸는 편이 좋다고 29%로 나타났다. 또한 마이니찌신문에 따르면 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46%, 개정해야 한다고 30% 등 대체로 부정적 견해를 보여주었다.²⁸⁾

IV. 자민당의 헌법개정초안과 아베의 개헌 논의

1. 2012년 자민당의 「일본국헌법개정초안」

아베와 자민당이 추구하는 일본의 모습은 현재의 일본국헌법(日本國憲法)과 2012년 자민당이 제시한 일본국헌법개정초안(日本國憲法改正草案)을 비교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먼저 전문(前文)을 보면 일본국헌법초안은 현행 헌법과 달리 ‘오랜 역사와 고유한 문화,’ ‘국민통합의 상징인 천황,’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공헌,’ ‘가족과 사회전체가 상호 돕는 국가,’ ‘활력있는 경제활동을 통해 국가를 성장시킨다,’ ‘전통과 국가를 오래도록 자손에게 계승하기 위해’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베와 자민당의 내셔널리즘적, 신보수주의적 가치와 함께 보통국가론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복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樋口陽一·小林節 2016, 148-149). 헌법학자인 히구치와 고바야시는 자민당 법무족(法務族), 특히 개헌론자들의 상당수가 세습의원이라는 점과 과거로의 회귀 성향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樋口陽一·小林節 2016, 30).

28) <https://www.j-cast.com/2017/05/03297160.html?p=all> (2017/05/07 검색).

29) https://jimin.ncss.nifty.com/pdf/news/policy/130250_1.pdf (2017/08/04 검색).

헌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헌법 제9조의 경우, 2012년 자민당 개정초안은 9조 1항은 그대로 두되 2항에서 '전항의 규정은 자위권 발동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국방군' 보유를 명기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헌법 개정과 관련된 96조에 대하여 헌법 개정에 필요한 조건을 의원 2/3 이상에서 '각 원의 총의원수의 과반수로 낮추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이래의 보통국가화 주장을 실현하려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두드러지는 내용으로, "모든(すべて) 국민은 개인(個人)으로서 존중된다"는 현행 헌법 13조를 2차 초안에서는 "전체(全て) 국민은 인간(人)으로서 존중된다"고 변경하고 있다. 이는 일본사회에 개인주의가 만연하다는 시각과 서구의 천부인권설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보여주는 것으로(舩添要一 2014, 4), 자민당 개헌론자들이 개인주의로 인해 일본의 사회적 연대가 사라졌으며 공동체가 붕괴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樋口陽一·小林節 2016, 68-69). 자민당은 『일본국헌법개정초안 Q&A 증보판 [국민의 권리와 의무] Q.14』에서 '인권규정도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전통을 감안할 필요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헌법의 규정 중에 서구의 천부인권설에 기초한 것으로 생각되는 규정이 여기저기 있어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樋口陽一·小林節 2016, 71). 히구치와 고바야시는 물론 2005년도 자민당 1차 헌법개정초안(신헌법초안)의 책임자였던 마스조에는 자민당의 헌법개정초안이 헌법에 도덕적 가치를 담으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舩添要一 2014, 5; 樋口陽一·小林節 2016, 138-139). 또한 헌법 36조의 경우 고문이나 잔혹한 형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에서 '절대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점, 98조의 총리의 '긴급사태' 선언에 대한 조항 삽입, 99조의 긴급사태의 효과에 대한 규정 등은 국가의 자의적 권력행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舩添要一 2014, 5; 樋口陽一·小林節 2016, 104-105).

그렇다면 아베가 구상하고 있는 개헌안은 무엇인가? 아베의 측근인 에토(衛藤 晟一)³⁰⁾ 아베가 목적하는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 묻자, '지금 자민당 총재로 당연히 다니가키 총재 시대의 개정초안'이라고 대답했다(塩田潮 2016, 267). 중의원 의원인 후나다(船田元)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는데, "우리는 12년의 일본국헌법초안이 아베 총리가 생각하는 헌법 개정의 모습이라고 이해한다. 2005년의 자민당 헌법초안 보다 12년의 초안이 야당 시대여서 더욱 과감했으며 아베 또한 관여했

30) 참의원 의원. 아베 정부의 내각총리대신 보좌관 역임.

고, 본인의 의견도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주장했다(塩田潮 2016, 268). 물론 아베는 계속해서 2012년 자민당의 개헌안에 얽매이지 않고 국회와 국민적 합의에 따른 개헌을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헌안 제시 없이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하는 상황에서는 자민당의 「일본국헌법 개정초안」이 상당 부분 반영되거나 또는 2017년 중의원 선거에서 제시한 주요 4 항목에 집중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중의원 선거와 개헌논의

재집권 이후 아베는 헌법 개정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여기서는 2012년 이후의 중의원 선거와 선거 전후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을 통해 자민당과 아베 총리가 개헌 문제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표 2〉 최근의 중의원 선거와 헌법 개정 관련 공약³¹⁾

중의원 선거	공약 내용
2012년 12월	국민주권, 기본적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의 세 원리를 계승 일본국과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인 천황을 받드는 나라로 규정 국기는 일장기, 국가는 기미가요로 함 평화주의를 계승하면서 자위권의 발동을 방해하지 않는, 국방군의 보유 명기 가족의 존중, 환경보전의 책무, 범죄피해자의 배려를 신설 무력공격과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긴급사태조항 신설 헌법 개정의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과반수로 완화
2014년 12월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서 헌법 개정 원안을 국회에 제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헌법 개정을 목표로 함 헌법 개정을 위한 선거권 연령을 앞당겨 18세 이하로 함
2017년 10월	국민주권, 기본적인권의 존중, 평화주의 세 가지 기본원칙을 견지 국민의 폭 넓은 이해를 얻고, 중참의원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심화하고 각 당과 연대하여 자위대의 명기, 교육무상화·충실화, 긴급사태대응, 참의원 합구(合区)해소 등 4개 항목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을 목표로 함

*출처: 자민당 홈페이지

31) 2012, 2014, 2017년 중의원선거 자민당정권공약.

https://jimin.ncss.nifty.com/pdf/seisaku_ichiban24.pdf (2012)

https://jimin.ncss.nifty.com/pdf/news/policy/126585_1.pdf (2014)

https://jimin.ncss.nifty.com/pdf/manifest/20171010_manifest.pdf (2017) (2017/12/01 검색).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민당이 야당으로서 정권 획득을 추구하던 2012년 중의원 선거 당시 자민당의 공약집 제목은 일본을 ‘되찾다(取り戻す)’였는데, 이는 자민당의 재집권이라는 의미와 함께 ‘전후’를 탈피하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본을 건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노병호 2015. 5). 2012년 선거에서 아베와 자민당은 ‘일본국헌법초안’의 주요 내용들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집권 후 치른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헌법에 대해 세부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선거 쟁점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2017년 10월의 중의원 선거에서는 적극적으로 헌법 개정을 내세웠으며 구체적으로 4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아베 총리는 2017년 10월 23일 당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구체적 조문은 당내 논의를 심화하여, 당의 개정안을 국회의 헌법심사회에 제안하고 싶다”고 했으며 “희망의 당은 물론, 여야당이 폭넓은 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을 거듭한다”고 강조했다(読売新聞 2017/10/23).³²⁾ 한편 아베 총리는 각각의 중의원 선거를 전후로 국정운영 방향 및 헌법 개정에 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표 3>.

<표 3> 아베 총리의 중의원 선거 전후 기자회견³³⁾

일시	내용 및 주요 발언
2012.12.26. ³⁴⁾	모두발언을 통해 96대 총리 취임 소감, 경제재생, 부흥, 위기관리, 미일동맹의 신뢰관계 재구축,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사회보장제도 관련 내용들을 언급함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의 해석변경에 소극적인 공명당과의 관계 재검토에 대한 아사히신문 기자의 질문에, 공명당과의 연립은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며, 헌법의 해석변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함
2014.11.21. ³⁵⁾	모두발언을 통해 중의원을 해산이 아베노믹스 해산이라고 주장함 집단적자위권의 행사 등에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선거쟁점화 할 것인지 묻는 니시니혼신문(西日本新聞)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변함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 - 해석 개헌)

32) <http://www.yomiuri.co.jp/election/shugiin/2017/news/20171023-OYT1T50165.html> (2017/11/27 검색).

33) 헌법 개정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34) http://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012/1226kaiken.html (2017/11/04 검색).

35) http://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014/1121kaiken.html (2017/11/04 검색).

일시	내용 및 주요 발언
2014.12.24. ³⁶⁾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수반으로 지명 받았음을 알리고, 소비세인상 문제 및 경제대책에 관해 언급함 2016년 참의원 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것인지를 묻는 니시니혼신문 기자의 질문에, 헌법 개정은 역사적 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선 중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국민들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깊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싶다고 답변함
2017.09.25. ³⁷⁾	모두발언을 통해 중의원 해산이 국난돌파(國難突破) 해산으로 고령화, 북한의 위협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함
2017.11.01. ³⁸⁾	모두발언을 통해 2020년까지 3년간 생산성 혁명, 유아교육 무상화, 고등교육 무상화, 북한 핵과 미사일, 납치문제 등에 대해 언급함 2020년에 개정 헌법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2017년 5월의 발언에 변화는 없는지, 2019년 참의원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생각은 없는지, 야당과의 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도통신(共同通信) 기자의 질문에, 그동안 헌법 개정을 당의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공약의 주요 항목으로 삼았으며 4개의 세부 항목을 표시했다. 스케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지난 5월의 언급은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생각하는 일정은 없으며 각 당의 개정안을 헌법심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 연속으로 여당이 2/3를 달성했지만 여야간의 폭넓은 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적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답변함

*출처: 수상관저 홈페이지

위와 같이 아베는 헌법 개정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여야당의 합의나 국민들의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아베 총리의 개헌 목표 중 제일 중요한 것이 헌법 9조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헌법 9조의 개정이 여론의 지지를 얻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헌법 개정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헌법 9조의 경우에는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36) http://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4/1224kaiken.html (2017/11/04 검색).

37) http://www.kantei.go.jp/jp/97_abe/statement/2017/0925kaiken.html (2017/11/04 검색).

38) http://www.kantei.go.jp/jp/98_abe/statement/2017/1101kaiken.html (2017/11/04 검색).

이다. 그렇지만 미일동맹 강화와 적극적 평화주의(積極的平和主義)를 통해 중국 및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아베의 전략을 위해 헌법 9조의 개정은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V. 결 론

전후 점령당국의 영향력 하에 만들어진 ‘일본국헌법’은 첫째, 일본인이 아닌 외부 세력의 주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 둘째, 지난 수십년간 정치·사회·경제 및 국제환경의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여 개정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자민당은 물론 다수의 정치세력들이 헌법 개정을 고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특히 자민당은 1955년 성립 당시부터 개헌을 당 설립의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하토야마, 기시, 나카소네, 고이즈미 등 주요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평화헌법 체제 속에서 이룬 일본의 번영과 안전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반(反)개헌 세력 또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2년 중의원 선거 이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다수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느린 속도로 헌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도 현실적으로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과거 1차 아베내각에서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 때문일 것이다.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의 일정이나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거나 공표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베 총리가 꾸준히 제기한 쟁점, 즉 일본인에 의한 헌법 제정 그 자체와 9조의 개정이 아베 개헌 구상의 핵심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베 총리는 계속되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에도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2012년의 자민당 ‘일본국헌법개정초안’이나 국회의 소신표명연설,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아베가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17년의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자위대의 명기, 교육무상화·충실화, 긴급사태대응, 참의원 합구 등 4개의 항목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자위대의 명기는 이미 진행 중인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헌법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개헌은 아베가 주장하는 전통주의, 국가주의적 가치의 확산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아베의 개헌 구상은 불분명한 측면이 많은데, 시오다는 아베의 개헌 목적이

기시가 강조했던 ‘자주독립의 일본’, ‘진실한 독립의 회복’으로서의 일본인의 손에 의한 헌법작성, 즉 자주헌법의 제정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塩田潮 2016, 266). 한편 아베 총리가 강조해온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면, 아베는 경제 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강한 국가 일본, 즉 군사력을 보유하는 국가가 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국가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가치들이 새로운 헌법에 반영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아베 총리가 2007년과 같이 갑작스런 퇴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점진적인 개헌 논의 방식으로는 개헌에 착수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자민당의 총재 3연임 허용으로 이미 5년 동안 집권한 아베의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아졌고, 아베는 집권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여 퇴임 전 헌법 개정을 위한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개헌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는 개헌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다만 아베가 부재한 상황이라도 개헌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물론 다수의 정당이 개헌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찬성 여론이 조금 더 많다는 점에서 멀지 않은 장래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경자. 2012. “현대 일본국 헌법 논의 구조 - 군사적 국제공헌론과 인권 담론의 대항 구조를 중심으로 -” 『일본문화학보』 55, 225-243.
- 김석근. 2016. “집단적 자위권, ‘안보법안’처리, 그리고 시민사회 - 아베정권과 ‘평화헌법’은 어디로 가는가.” 『문예비평』 100, 148-163.
- 김재호. 1999. “전후일본에 있어서 헌법개정 논의의 전개과정과 쟁점.” 『동서연구』 11(2), 5-16.
- 김태홍. 2015. “일본의 ‘해석개헌’방식 -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개헌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6(1), 213-246.
- 남상욱. 2014. “아베신조 『아름다운 나라로』 속의 ‘미’와 ‘국가.’” 『일본비평』 10, 164-189.
- 노병호. 2015. “현대 일본 보수주의의 의지와 현실.” 『일본사상』 28, 3-28.
- 박영준. 2013.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의 대두와 일본 외교: 자민당 아베 정권의 재출범과 한반도정책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29(1), 91-121.
- 박철희. 2008. “일본 정당들의 헌법개정안 시안 분석을 통해서 본 개헌 논의의 정치과정.” 『일본연구논총』 27, 65-92.
- 성황용. 1996. “일본의 헌법개정론.” 『일본연구』 11, 145-168.
- 오미영. 2014.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헌법해석변경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43, 639-663.
- 와타나베 오사무. 2007. “아베정권의 역사적 계보.” 『정세와 노동』 28, 88-118.
- 와타나베 오사무. 2008. “아베정권의 역사적 계보 (3).” 『정세와 노동』 31, 107-128.
- 야가사키 히데노리. 2003. “일본국 헌법제정 경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7(5), 219-239.
- 이경주. 2000. “헌법조사사회와 평화주의-일본의 개헌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3, 153-173.
- 이기완. 2013. “민족주의적 국가전략을 통해 본 아베 내각의 대외정책과 동향.” 『국제정치연구』 16(1), 126-142.
- 이명찬. 2014.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과 국가노선의 대전환.” 『일본연구논총』 40호, 155-189.
- 전진호. 2007. “21세기 일본의 국가이념과 헌법조사사회.” 『일본연구논총』 25, 1-31.
- 전황수. 2000. “일본의 헌법조사사회발족과 개헌논의.” 『한국과 국제정치』 33, 301-330.
- Samuels, Richard J. 2007. *Securing Japan: Tokyo'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朝日新聞取材班. 2016. 『この国を揺るがす男:安倍晋三とは何者か』. 東京: 筑摩書房.
- 安倍晋三. 2006. 『美しい国へ』. 東京: 文春新書.
- 塩田潮. 2016. 『安倍晋三の憲法戦争』. 東京: プレジデント社.
- 高見勝利. 2017. 『憲法改正とは何だろうか』. 東京: 岩波書店.
- 樋口陽一・小林節. 2016. 『「憲法改正」の真実』. 東京: 集英社.
- 舛添要一. 2014. 『憲法改正のオモテとウラ』. 東京: 講談社.

신문

『朝日新聞』

『産経新聞』

『日本経済新聞』

『読売新聞』

인터넷자료

자민당 정권공약. <https://www.jimin.jp/policy/manifest/> (2017/12/01 검색).

수상관저 기자회견. <http://www.kantei.go.jp/jp/pressconference/index.html/>
(2017/11/04 검색).

Abstract

Prime Minister Abe's Conception of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Eui Suok Han ■ Sungshin University

Revi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has been a critical political issue in Japanese politics since the current constitution was established during the occupation by the Allied Powers.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presented a revi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when the party was established, and Prime Minister Abe continues to revise it after he came back as a prime minister in December 2012. Constitution is a crucial text for containing any country's governance structure, civil rights, national identity etc. This article tries to understand background and aims of the current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analyzing LDP and Abe's conception of the revision of current constitution.

Key Words: Revis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Abe Shinzo, Liberal Democratic Party

